

‘범죄’의 재구성:

1977년 무등산 철거반원 살해 사건을 둘러싼 물음들*, **

이영진***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부르는 악당은 죽여 버려.

그래 죽여 버릴게.

꼭 죽여.

그래. 꼭.

꼭.

조세희,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 중에서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6).

** 원고를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세 분의 익명의 심사위원과, 본고의 초고 발표에서 많은 귀중한 조언을 해주신 호남학 연구원의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박병기 선생님은 70년대 중후반 광주의 모습과 당시 광주의 민주화 운동, 나아가 박홍숙의 형무소 시절에 대해 장시간동안 생생한 말씀을 들려주셨다. 유신체제 하의 한국사회에서 당시의 교육현실에 거의 유일무이하게 저항했던 ‘교육지표사건’의 ‘진실’이 35년 만에 사법적으로 완전히 복권된 것에 대한 축하의 말씀과 함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HK 연구교수

1. 들어가며

2013년 광주의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광주역 광장에는 ‘경축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이라는 조형물이 세워지고, 지역 신문들도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이 “무등산의 브랜드 향상은 물론 광주가 갖고 있는 민주, 인권, 그리고 평화의 이미지가 재정립되어 광주의 이미지도 고양될” 것이라며 반기는 추세다(『광주일보』 2013. 1. 8). 하지만 이런 축하의 물결 속에서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무등산 도립공원 지정과 맞물려 진행된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철거사업이 빚어낸 비극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다. 1미터 65센티미터의 작은 키에 날렵한 근육질의 몸매, 곱슬머리 둥근 얼굴에는 아직 소년티를 벗지 못한 천진함이 배어나온다. 쌍절곤을 손에 든 그는 옷통을 벗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1977년 4월 주요 일간지들의 사회면을 메운 이 사진의 주인공은 ‘무등산 타잔’이라는 별칭으로 더욱 유명한 박정렬(일명 박홍숙/이하 박홍숙으로 표기)이다. 그는 1977년 4월 20일 자신의 가족과 함께 살던 무등산 덕산골의 움막집을 철거하러 온 시의 철거반원 다섯 명의 머리에 망치를 휘둘러 네 명을 살해하고, 한 명에게 치명적인 중상을 입힌 ‘흉악범’(“白晝의 殺戮 … ‘巫堂村’의 發惡”[『전남일보』 1977.4.22])으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미디어에 묘사된 그의 이미지들을 그러모아 보면, “무등산 타잔”, “무등산 수호신”, “무등산 十八技 창시자가 되겠다고 별러와”, “학교도 다니지 않고 일정한 직업도 지니지 않은 채”, “중국 영화에 나오는 이소룡처럼 되겠다고 단봉을 익히며 칼 던지기를 연마했고 낙법, 줄타기도 연습(이상 『전남일보』 1977. 4. 23)”, “거의 나는 듯한 산타기의 명수”, “공인되지는 않았으나 태권 4단, 유도 3단의 실력에 기합술까지 연마, 평소에 뒤뜰린 영웅심리 잠재해 있었을 것(『동

아일보』 1977. 4. 23)” 등, 부정적 이미지 일색이다. 다시 말하면, 미디어들은 그를 하나같이 이해가 불가능하고 순화도 불가능한 범죄자, ‘괴물’로 표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1978년 2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그는 판결을 뒤집으려는 구명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해 5월 최종심에서 사형이 확정, 결국 2년 뒤인 1980년 12월 24일 저녁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 기사들은 하나 같이 추측성 기사에 근거 없는 인상 비평 일 뿐이었다는 것은 이후 밝혀졌다(김현장 1977). 그렇다면 1970년대 후반 매스 미디어가 만들어낸 이러한 ‘판타지’를 통해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당시 무등산에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 이 사건을 다루는 대다수의 논의는 사건 이후 특히 지방지를 중심으로 대서특필된 10여 일간의 신문기사 및 이후 김현장이 남긴 두 편의 르포기사 『월간 대화』(1977. 8)에 실린 “무등산 타잔의 진상: 무책 임한 신문보도를 폭로한다”와 다음 해인 1978년 8월 『뿌리깊은 나무』에 실린 “이 불쌍한 무등산 청년의 죽음과 죽임”-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김현장의 글은 당시 매스 미디어의 일방적인 보도에 반발하여, 직접 덕산골을 현장 조사하여 박홍숙의 일기를 수집했을 뿐 아니라, 당시 덕산골에 살던 다수 주민들의 인터뷰도 확보함으로써, 사건에 대한 당대의 가장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텍스트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학문적 개입으로 거의 유일한 논고는 김원(2011)의 연구를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논의들을 출발점으로, 이 사건을 70년대 후반 광주라는 한 지방도시의 역사에 다시금 자리매김하면서, 70년대 한국 사회의 권력의 근대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작동했던 정상/비정상이라는 구분의 메커니즘의 한국적 판본(version)을 읽어내고자 한다. 나아가 이렇게

구조화된 정상/비정상의 담론 공간에서 체포된 박홍숙이 치러야 했던 싸움의 의미를 법정 최후진술과 구명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스피박(G. Spivak)이 오래 전에 던진 ‘진부한’, 하지만 여전히 유효한 질문, “하층민은 말할 수 있는가(Can the subaltern speak)”라는 물음을 재고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2. 무등산 ‘덕산골’의 사회적 생산

박홍숙 사건을 이해하는 첫 출발점으로서 먼저 고찰해야 할 것은 사건이 일어났던 무등산 ‘덕산골’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즉 그 ‘사회적 생산’의 측면이다. 여기서 사회적 생산이란 물리적 장소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 이데올로기적, 기술적 요소들이 미치는 작용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로, 특정 공간이 역사적으로 출현하는 정치경제적 맥락을 포착하는 데 유용하다(Low 1999: 112). 다시 말하면 무등산 한 가운데 왜 그런 무허가 거주자촌이 형성되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지, 또 왜 그 마을에 철거반원들이 공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찾아왔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 한국사회의 도시화의 정치경제적 맥락을 우선적으로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급속한 산업화와 그로 인한 시골에서 도시로의 인구유입(이촌향도) 및 도시 인구 과밀이 1970년대 한국 사회의 도시 곳곳에 무허가 정착지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시당국은 철거 이주 정책을 추진했지만, 그 정책은 무허가 정착지들을 구조적으로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1971년의 광주(廣州) 대단지 사건은 그 과정에서 누적된 모순의 한 폭발이었다(장세훈 1989; 김원 2011; 최인기 2012). 철거 빈민들의 집단적 생존투쟁이 정치성을 띤 대규모의 ‘도시 사회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위험’을

목도한 정부는 70년대부터 주로 도심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한 철거 정비정책과 주민들 개개인의 주택 자원 및 자조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주택 재개발정책을 병행하는 식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된다. ‘주택 건설 촉진법’(1972. 12)이나 ‘주택 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1973. 12/ 이하 임시조치법)은 그러한 전환된 정책의 한 형태였다. 임시조치법은 (1) 무허가 정착지와 도시 빈민에 대한 강제력 행사의 억제와 제도화된 주민 동원 체제의 구축, (2) 재개발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의 주민 전가 기제의 제도화, (3) 불하를 통한 무단 점유 국공유지의 상품화를 통해 무허가 정착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장세훈 1989: 203-212 참조).

이렇듯 억압적 권력에서 생산적인 권력으로의 전환, 그리고 무지(無知)를 이용하는 권력이 아니라 앎의 형성에 의해서만 기능하는 권력 유형으로의 전환은 근대 서구의 권력 메커니즘에 천착한 푸코(M. Foucault)에 의해 정치하게 분석된 바 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주석들이 씌어진 지금 여기에 또 다른 논의를 덧붙이는 것 자체가 사족이 되겠지만, 논의의 출발을 위해 푸코의 권력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근대에 접어들면서 권력 모델이 억압적 권력 기술로부터 무언가 만들고 관찰하는 권력, 모든 것을 아는 권력, 그리고 스스로의 효과에서부터 자신의 힘을 증식시키는 그러한 권력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Foucault 2001: 67). 하지만 여기서 ‘넘어갔다’는 것은 이전의 억압적 권력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생산적 권력으로 전환되면서도 기존의 억압적 권력은 그 이면에서 언제든지 타자의 배제와 구축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1970년대 한국사회에서 만들어진 일련의 법들이 반드시 ‘생산적인’ 효과만을 창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임시조치법 역시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중간 계급의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생산적 권력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도시 빈민의 주거 공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당시 도시 빈민들은

정부가 내세우는 주민 자조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자산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주택개량촉진법은 부족한 주택건설재원과 아파트 투기 열풍 때문에 국가가 아닌 민간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도시재개발법’(1976)으로 바뀌고, 임시조치법만이 남아 무허가주택을 이주시키는 억압적인 ‘강제 철거법’으로 1981년까지 사용된다(광주직할시 1992a: 333-334; 유경남 2013: 248 참조).

지금까지 간략히 언급한 197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광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우선 도시인구 과밀도를 보면, 1955년 이후 행정구역의 변동에 따른 변수를 제외한다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행정구역이 안정화된 1965년부터 74년까지 광주시 인구는 연평균 6.1%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으며, 1970년대 후반에도 연평균 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1977년 5.10%, 1978년 5.60%, 1979년 5.40%). 실례로, 1968년 말 46만 명이 살던 광주 거리는 1979년 말에는 73만 명 선을 넘어서면서, 10년 만에 51%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광주의 도시 인구 증가가 자연 증가 외에도 산업화에 따른 이촌향도, 즉 전남의 농촌 지역 인구 유입 때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 시기 전남 지역의 인구수는 1970-80년대 증가분이 -157%라는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이상 『광주시사』 1995-1997 참조).¹⁾

이렇듯 예측 불가능한 인구 증가는 주택문제의 심화를 가져온 가장 큰 요인이었다. 통계를 보더라도 1959년 72.3%에 달하던 광주시의 주

1) 박홍숙 사건이 일어난 것과 동일한 해인 1977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합평군 고구마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합평군 고구마 사건’은 고구마 수매를 둘러싸고 벌어진 지역 농민들과 농협 사이의 갈등이긴 했지만, 그 이면에는 생고구마의 홍수 출하를 막기 위해 수익성이 보다 높은 ‘절간 고구마’(얇게 썰어서 말린 고구마)를 많이 생산하도록 농협이 권고했음에도, 농민들이 이에 응하지 못했던 가장 결정적 이유가 이촌향도로 인한 농촌의 심각한 일손부족 문제였다는 뼈아픈 현실이 가로놓여 있었다(조영호 1977: 172-173).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이동에 따른 빈민, 철거의 문제를 도시만의 문제가 아닌 농촌의 문제와 연동해서 접근하는 시도가 요청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택보급률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상황이 악화되면서, 1970년에는 54.4%까지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70년대에 들어 시 당국은 다양한 형태의 공영주택(국민주택) 및 철거민 주택(1973년)을 만들었지만, 인구 증가율과 비교해 볼 때 광주시의 주택 보급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1970년대 주택 현황을 보더라도, 1970년(54.4%)에 정점을 찍었던 주택 보급률은 완만하게 상승하지만 평균 60%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더불어 1975년과 1976년 두 차례에 걸쳐 기존 시가지의 황폐화 및 사회계층간 괴리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시계획재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개발제한구역의 과다 신설로 이전보다 오히려 주거지역이 크게 감소함으로써 주거지 문제는 오히려 심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광주직할시 1992b: 157-158).

그 결과 많은 집 없는 서민들은 셋방살이를 전전해야 했다. 당시 광주시의 양동, 임동 일대는 그러한 서민들의 집단 주거지였고, 지금의 광천 초교 근방에는 산동네가 형성되어 있었다(박병기 선생님 인터뷰 2013. 4. 19).²⁾ 박홍숙 일가 역시 바로 이 시기, 1971년에 전남의 한 농촌지역(영광)에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광주라는 도시로 흘러들어 온 무주택 도시 빈민층이었다.³⁾ 그리고 그들이 찾아간 곳은 무등산 덕산골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무등산’으로 향한 것일까. 박홍숙 사건을 이해

2) 박병기 선생님은 1970년대 중후반 전남대학교 학생이던 시절, 광주의 도시변화 및 사회운동에 대한 많은 상세한 기억들을 가지고 계셨다. 특히 1978년 전남대학교 교육지표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었을 때, 그의 옆방에 수감되었던 이가 바로 박홍숙이 었기 때문에, 형무소 시절의 박홍숙에 대해서도 많은 개인적 기억들을 필자에게 들려주었다.

3) 김현장은 박홍숙이 태어나서 광주, 무등산에 집을 짓고 살기까지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는 영광군 불갑면 자비리 노은부락에서 가난한 농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박홍숙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시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듬해에는 형까지 세상을 떠났다. 그 후 그의 여섯 식구는 군서면에 잠깐 이주하였다가 박홍숙이 군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다시 무등산으로 가난에 쫓겨 이사하였다. ... 이때부터 여섯 식구는 산지기를 하는 박홍숙의 이모집 옆에 비어있던 다른 산지기 집에 들어 살았다(김현장 1977: 122).

하기 위해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무등산’이라는 자연공간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그리고 변화이다. 무등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산들을 도립공원화 하려는 움직임에서 자연을 ‘관광자원’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획은 근대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다. 1967년에 제정된 ‘공원법’은 “도시화에 따른 건전한 휴식 공간의 확보 및 자연경관의 보전의 필요성으로 단순한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자연의 합리적 관리”라는 그 제정 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광주직할시 1992a: 677), ‘자연’이 개발되어야 할 ‘국토’로 자리매김 되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것은 전통적으로 평야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는 쫓겨난 유민들(산적에서 빨치산에 이르는)이 숨어들어갔던 피난처, 누구의 소유도 아닌 땅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무등산 개발의 역사는 195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7년 광주 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 시작한 이 개발 사업은 성과는 미미했지만, 무등산으로 가는 도로의 개설과 확포장 사업 등, 해방 이후 무등산을 ‘관광자원’으로 인식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박선희 1990: 324-328).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72년 5월 도립공원 지정과 함께 “무등산도립공원종합개발”(1974)이 확정되는 1970년대 중반 무렵부터이다(유경남 2013 참조). 정책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무등산도립공원은 시내에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시설이 미비하고 진입도로의 불량으로 시민에게 거리감을 주어 시민의 휴식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광주직할시, 1992a: 662)”이라는 상황 인식은 역으로 이 시기에 이르러서야 무등산이 근대적 의미의 개발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법 제정과 함께 무등산 개발의 무리한 가속화를 낳은 또 하나의 요인은 최고 통치자의 ‘시찰’이었다. 메이지 시기 천황의 전국 순

행(巡幸)이 그러했던 것처럼(Fujitani 2003[1996]), 최고 통치자의 시찰은 1960-70년대 한국 사회에서 “조국 근대화”를 감시하는 강력한 시선의 권력이었다. 한 제보자는 “산수동에서 산장으로 올라가는 도로와 보도블록이 하루 만에 정비되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 여기저기 ‘시찰’을 다니면서, 광주 지역 일처리가 늦어지는데 역정을 냈고, 그래서 행정 하부에서는 불을 질러서라도 판잣집들을 없애버리라는 말이 돌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박병기 선생님 인터뷰, 2013. 4. 19)”고 회고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 내 도심지에서 무등산 중심사에 이르는 도로가 포장된 시기는 이 무렵(1974년)이었으며, 대통령의 일련의 시찰이 지역 내에서의 과잉행정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었다는 점 역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이제는 말할 수 있다: 무등산 타잔 박홍숙 사건』 2005. 5. 15). 여기에 1977년 10월에 광주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전국체전’ 역시 시당국으로 하여금 무등산 내 무허가 거주지의 철거를 앞당기게 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광주 시내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무등산으로 들어간 원주민들이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1백 80여 가구의 무허가 주택들이 본격적으로 철거되기 시작한다. 박홍숙이 움막을 지은 무등산 덕산골 역시 그 화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무등산 도립공원 개발의 일환으로 도립공원 내 케이블카 건설계획이 추진되어 가시거리에 있던 덕산골 역시 철거 대상에 포함되었던 것이다. 그의 움막은 “표면상 자연 풍경지의 보호와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공원법’에도, 그리고 국토종합개발 도시계획의 ‘개발제한구역’ 법에도 저촉되는 ‘전면철거’ 대상이었다(유경남 2013: 248-249). 그 결과, 1970년대부터 20여 채의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던 덕산골은 수차례에 걸친 강제철거 끝에 사건이 일어날 즈음 4채 정도가 남아 있었다.

문제는 비록 판잣집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정성들여 짓고 생활해 온 집이 철거되고 불살라지는 아픔은 차치하더라도, 쫓겨난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는 현실이었다. 그들이 느끼는 ‘절망’은 결코 사회적으로 인지되지 못했다. 도시계획, 무등산 개발을 다루는 『광주시사』의 어디에도 그들에 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또 “이사 갈 곳이 없다”는 그들의 절망적인 현실마저 미디어의 눈에는 ‘막연한 이유’(『한국일보』 1977. 4. 22)로 비춰질 뿐이었다. 결론적으로 화약고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불이 붙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도화선이 된 것은 상명하달식의 군대식 행정체제와 그 압박 아래서 행정말단이 보여준 무자비하고 ‘그로테스크한’ 권력의 행사였다.⁴⁾

3. ‘괴물’의 그림자 1: ‘정상’의 시선에 비친 ‘비정상’

사건 직후부터 박홍숙은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뒤틀린 영웅심리”에 사로잡힌 “고독한” ‘괴물’(monster)이자 ‘비정상인’으로 규정되었다. “내가 출세하면 그냥 둘 줄 아느냐! … 출세욕과 복수심, 이러한 야심 등이 비정상적으로 뒤범벅된 탓이었는지, 그는 항상 스스로를 무자비하게 단련했는지도 모른다(『전남매일』 1977. 4. 23)”와 같은 기사나, 기자와의 일문일답 자리에서 “시종 다리를 괴고 앉아 뻘뻘스러울 정도로 침착한 태도를 보였으며 때로는 미소를 짓는가 하면 ‘하하’ 하고

4) 여기서 ‘그로테스크’라는 표현은 푸코가 현실 관료제의 권력 행사를 비교면서 썼던 용어를 빌려 쓴 것이다. “나는 그로테스크하다는 말을 아주 엄격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약간 치밀하고 진지한 의미로 사용하였다. 하나의 담론 혹은 한 개인이 자신의 내적 자질만으로는 도저히 가지지 못할 권력의 효과를 자신의 지위에 의해 가지고 있을 때, 나는 그것을 ‘그로테스크’라고 부를 것이다. … 그로테스크란 자의적 주권의 근본적 과정이자 동시에 현실관료제의 고유한 과정이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의 효과를 지닌 행정장치가 천박하고 형편없으며, 아둔하고 경박하며, 우스꽝스럽고 너털거리며, 초라하고 무기력한 관리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이 19세기 이래 서구 관료제도의 근본적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그로테스크한 행정은 단순히 발자크, 도스토옙스키, 쿠르틀린 또는 카프카 등이 꿰뚫어 본 모습만은 아니었다. 그로테스크한 행정, 그것은 결국 관료제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가능성이었다(Foucault 2001: 28-30 /강조-인용자).

헛웃음을 치기도 했다(『전남일보』 1977. 4. 25)”는 등의 묘사는, 반사회적인, 따라서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해야 하는 ‘괴물’로 그를 보는 시선의 대표적 일례들이다.

이렇듯 반사회적으로 보이는 인물을 ‘괴물’로 묘사하는 시선은 결코 예외적인 것이 아니다. 1958년 한 일본인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용의’로 체포된 이진우 사건(소위 ‘고마쓰가와 사건’[小松川事件]. 서경식 2006 참조)이나, 시기를 한참 거슬러 19세기 중엽 프랑스에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죽인 혐의로 체포된 피에르 리비에르를 보는 수사당국이나 미디어(신문), 법의학 감정서들의 시선(Foucault 2008)에서도 그런 경향성은 뚜렷이 나타난다. 천편일률적인 보도를 했던 매스 미디어, 그리고 그들에게 (원)자료를 제공했을 수사당국이 그를 비정상적 ‘괴물’로 간주한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 사회가 한 범죄자를 ‘괴물’, 나아가 ‘비정상’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얇은 메커니즘, 다시 말하면 범죄의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앞서 푸코의 논의를 떠올린다면, 이것은 18세기에 출현한 권력 장치의 새로운 절약체계, 즉 권력행사의 비용을 감소하면서 권력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장치의 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잔혹성을 대체한 형벌권의 새로운 경제원칙은 범죄의 원인으로서의 이해의 원칙이었다. 다시 말하면, 범죄자의 행위 밑바닥에 있는 잠재적 ‘이해’(利害)가 범죄의 내적합리성이 되며, 이는 범죄의 이해(理解)를 도우면서 동시에 그것이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합리화해준다는 것이다. 정신의학이라는 얇이 무대에 등장하는 것 역시, 광기가 질병이자 위협으로 코드화되던 바로 이 시기, 사법적 권력과 의학적 권력이라는 두 상이한 권력 사이의 맞물림과 필요 속에서였다. 무질서한 모든 것, 즉 규율 부재와 소란, 불순종, 반항적 성격, 애정 결핍 등이 모두 하나의 징후로서 정신의학의 대상이 됨으로써, 정신의학은 광기와 범죄의 근본적인 상호귀속성을 만들어내

는, 즉 비정상을 기술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Foucault 2001).

푸코의 권력론이 18-19세기에 출현한 새로운 권력을 다양한 삶의 의지들이 충돌하는 권력장 내에서 계보적으로 추적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면, 사적 유물론은 그러한 권력이 출현하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설명하는데 더욱 유용한 틀이다. 그 한 예로 만델(E. Mandel)은 근대자본주의와 범죄소설의 관계를 사적 유물론의 입장에서 추적한다. 범죄소설의 역사를 추적해보면, 자본주의의 발전과 극빈 상태, 범죄, 그리고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원초적인 사회 반란이 전개되던 19세기 중엽이 그 최전성기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인간의 ‘생물학적인 운명’, 폭력에 대한 열정, 범죄의 불가피성에 대한 통찰을 기존 사회질서의 옹호와 변명에 이용하려는 부르주아 계급의 객관적인 욕구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부르주아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운명과 무관한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순수한 공포를 연루시킴으로써 일시적으로 그러한 공포를 억압-망각-한다. 그리고 초기에 부르주아 계급의 전유물이었던 범죄소설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대중에게로 확산된다(Mandel 2001: 26-29, 127-128 참조).⁵⁾

이상의 논의들은 당시 형사당국과 그 영향을 받은 대중매체들이 그토록 박홍숙의 범죄가 갖는 사회적 성격을 지우고 유독 ‘괴물성’에만 주목한 이유를 이해하는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무허가 판자촌이라는 ‘우범지대’ 혹은 ‘사이비 종교의 소굴’에 살면서 정부의 행정 권력을 행사하러 온 다섯 명의 철거반원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괴력으로

5) 만델의 저작에 대해서는 김원의 연구(2011)에서 시사를 받았음을 밝혀둔다. 특히 20세기 초중반, 전 세계적으로 범죄 소설 독자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만델은 농업의 쇠퇴와 대규모의 이동, 대도시 광역권의 괴물 같은 성장, 가정과 직장 간의 거리 증가, 먼지와 소음이 가중시킨 대기 오염, 컨베이어 벨트로 예측되는 신경과민의 강화 등과 같은 현상들이 기본전환이라는 강력한 욕구를 창출해냈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었던 것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범죄소설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들을 압도하고 급기야 네 명을 살해했던 박홍숙의 행위는 ‘비정상적 광기’ 이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수수께끼였을 것이다.⁶⁾ 나아가 서슬 퍼런 유신체제 하에서 자신들의 정당성의 원천인 국토개발(발전)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자, 국가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 실제로 박홍숙이 지내던 광주 교도소 독방에는 그를 격려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보낸 편지들이나 접은 학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고 한다. 물론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가 왔는지 그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를 당시 한국 사회의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박홍숙이 누렸던 인기의 한 반증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커다란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가 신출귀몰한 무공의 소유자라느니, 사법고시 1차를 ‘패스한’ 천재라느니(실제로 그는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을 뿐 1976년의 사법고시 1차에서는 떨어졌다고 한다) 하는 소문들이 퍼져 있던 것도 당시 그를 바라보던 사회의 시선의 일면을 보여준다.⁷⁾

이러한 가상의 위험을 봉합하기 위해 권력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괴물을 만들기 위한 절차로서, 그가 성장한 가정환경이 편의적으로 재구성되고(극심한 빈곤, 폭력 전과 1범, 여기에 편모슬하, 아버지와 형이 자살했다는 ‘가족력’이 추가되었다), 동시에 ‘뒤틀린 영웅심리’ 등과 같은 의사-심리학적 기술과 더불어, 마지막으로 사건이 일어난 무등산 덕산골 자체가 뽑어내는 광기(=무속)가 포개어졌다. 하지만 1970년대 남한 사회에서 정신

6) 박홍숙의 체포로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그 사건을 단독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다. 아무리 딱총이 아닌 진짜 총을 들고 있다 해도 긴장한 장정 7명이 박홍숙이라는 한 개인에게 그토록 무참히 당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그 의문의 요지였다. 그래서 『조선일보』와 같은 중앙지에서는 사건 다음 날인 4월 21일, “(철거반원) 2명이 주민들로부터 낮에 쫓겨 죽었다”는 오보를 내기도 했다.

7) 박홍숙의 교도소 수감시절에 대한 묘사는 박병기 선생님의 인터뷰(2013. 4. 19)를 통해 재구성한 것이다. 1978년 전남대학교 교육지표 사건으로 체포된 그는 우연히 박홍숙의 옆방에 수감되었기 때문에, 광주 교도소 시절 사형수 박홍숙의 일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의학은 권력의 작동에서 어디까지나 한정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머물렀다는 것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정신의학적 지식은 박홍숙을 비정상적 괴물로 만드는데 이용되었을 뿐, 왜 그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동기를 묻는 정신의학의 본연적 임무는 방기하고 있었다. 그것은 사회적 범죄를 논의하는 장에서 정신의학이 흑여 가질 수 있는 역동성이 1970년대 남한 사회에서는 애초부터 거세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당시 신문으로 대표되는 대중매체는 박홍숙 사건에 대해 왜 그토록 편파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로 일관했을까. 그 배후에 행정 권력의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이제는 말할 수 있다: 무등산 타잔 박홍숙』 2005. 5. 15). 하지만 행정 권력의 외압과는 별개로, 거기에는 대중들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중매체들에게 이 사건은 판매부수를 늘릴 수 있는 하나의 호재였을 것이다. 앞서 만델의 논의를 떠올린다면 1970년대 산업화와 대중사회의 등장으로 한국사회에서도 범죄/추리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이미 높아져 있었고, 〈특별수사본부〉(MBC 1973-1975)나 〈수사반장〉(MBC 1971-1989) 등 TV 범죄 시리즈물에 익숙해진 대중들은 이들 신문들의 잠재적 독자들이었다.

특히 신문 판매를 위한 경쟁에서 중앙지에 고전하고 있던 당시 지방지에게 있어, 자신의 고향[鄕土]에서 일어난 이 ‘엽기(獵奇)적’인 사건은 훌륭한 먹잇감이 아닐 수 없었다. 이미 1970년대 초부터 지방지의 위기는 가시화된 상황이었다. 그 한 예로 한 지방신문의 이사는 “기왕에도 중앙사와의 격차는 있어온 것이지만 그 폭을 좁혀 가지는 못할망정 더욱 벌어지게 한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며 “솔직히 말해 현상유지마저 힘겨운 것이 한국 지방지의 현실”이라고 토로하고 있다(전병학 1972). 이런 상황에서 ‘박홍숙 사건’과 같은 케이스는 지방지로서는 놓칠 수 없는 호재(好材)였을 것이다. 그래서 전남일보나 전남매일과 같은

지방지는 사건 당일부터 연일 선정적인 타이틀을 뽑아내면서 자극적인, 하지만 근거 없는 기사들을 쏟아내는 데 더욱 열을 올렸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건 자체, 나아가 박홍숙이라는 한 개인의 면모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시간적 여유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웃 사람의 증언에서 드러나듯, “평소 싸움이나 자주 하고 인상이나 우락부락하다면 모르지만 말수도 적고 그렇게 순할 수가 없는”, “포리(파리)가 미끌어도 쓰러질 것 같은 순하고 약한 사람”(김현장 1977: 133-134)과 매스 미디어가 묘사한 “괴물”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연결고리가 필요하지만, 전자의 이미지는 철저하게 잊혀졌다.⁸⁾ 그는 괴물이 아니면 안 되었고, 만약 괴물이 아니라면 그들은 괴물은 만들어내야 했다. 그리고 그 ‘괴물’은 바로 “우리가 가진 두려움의 메타포(Kearney 2004: 210)”였다.⁹⁾

8) “엇그제 당선된 8대 대통령 취임식 날 나는 대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대통령 각하에게 진심으로 앞날의 국민총화에 무궁한 지도력과 우리 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기원하였다. 박대통령 각하에게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2.27 선거다. 조용한 공명선거가 되길 빈다(『박홍숙 일기』, 김현장 1977: 126에서 재인용)”와 같은 일기의 한 대목에서 보듯, 실제로 그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극히 체제 순응적인 국민이었고(그의 꿈은 사법고시에 패스하는 것이었다), 철저반원들을 욕하는 어머니에게도 “그 철거하러 오는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서민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는 짓인데 그 사람들을 욕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등, 지극히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진 청년이라는 ‘사실’은 기각되어야 했다.

9) 오창은은 1960-70년대 한국 도시소설에 관한 연구에서 이문구나 황석영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범법자의 형상을 띠는 경우가 많으며, 그 이유를 이들 범법자가 1960-70년대 한국 자본주의의 급격한 팽창 외중에 형성된 부산물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오창은 2005: 148-149). 일반 서민들이 빈민들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의 한 일면은 윤홍길의 『아홉컬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 주인공의 아내의 입을 통해 묘사되고 있다. “시장까지, 시장에서 집까지 쫓아다녔다니깐요. 푸줏간에 들러서 돼지고기 살까 쇠고기 살까 생각하는 참인데 웬지 모르게 뒤쪽이 이상해서 얼핏 돌아다봤더니, 아 글썄, 저만치에 여편네가 서 있질 않겠어요. 엘 둘러엮구 그 우묵한 눈으로 뚫어지게 쬐보는 거예요. 내가 집을 나설 때 분명히 곱목 안쪽에 있었는데 어느새 예계정 뒤뵈아왔나 싶어서 갑자기 섬뜩한 생각이 들더군요. … 어쩌나 가슴이 발랑거리던지 집어삼킬 것같이 노려보는 그 시선 앞에선 차마 고길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 푸줏간을 그냥 나오고 말았죠. 생선전으로 들어서려니까 여편네가 또 소리 없이 뒤를 밟잖아요. 무서워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었어요. 곧장 집으로 종종걸음을 쳤지요. 이만하면 이제 안 따라오겠지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꼭 고만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따라붙어요. 그래서 마구 뛰었어요(155-156).”

4. 괴물의 그림자 2: 무속(巫俗)이라는 암흑

그를 비정상인, 나아가 괴물로 규정하는 담론의 또 하나의 축을 형성하는 것이 ‘무속’에 대한 과잉된 관심이다. 박홍숙 사건이 터지자마자 지방지들은 연일 “邪敎의 濫床 무등산 巫堂村을 벗긴다”(『전남일보』 1977. 4. 21-4. 23)는 선정적인 타이틀 아래 “사교촌(邪敎村) 20대 청년의 발악이 끝내 무등산을 피로 물들이고 말았다. 당국의 끈질긴 정화작업에 맞선 최후의 발악이었는데도 모른다”와 같은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써대면서, 박홍숙의 범죄를 무당골이라는 장소성과 연계시키려 했다. 미디어의 눈에 무당골은 “우범지역” 이자 “邪敎의 濫床”(『전남일보』 1977. 4. 22)이었고, 그는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무당의 아들”(『조선일보』 1977. 4. 22)이 되어야 했다.

증심사에서 무등산정 쪽으로 2km 남짓 떨어진 풍치 좋은 계곡이 바로 사이비 종교단체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 덕산(德山) 계곡. 이 계곡이 붐비기 시작한 것은 5-6년 전부터였고 작년 초에 절정을 이루었다.

… 무당촌 주변이나 외진 곳에 움막을 짓고 광주 시내 점장이들에게 푸닥거리 장소로 방을 대여해주는 집도 무등산 안과 주변에는 많다. 바로 20일 사고를 낸 범인 박홍숙의 집이 같은 집이다(『전남일보』 1977. 4. 21-4. 22).

50년의 고질 사이비종교의 고장 광주 무등산 한뎀 50여개 종파 난립, 계곡서 괴성 푸닥거리: 전남의 제 1호 도립공원이자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이 사이비종교의 아성으로 말썽을 빚더니만 끝내 살인극을 빚고 … 광주시는 이번엔 이들을 철거하기 위해 세 차례나 자진철거토록 계고장을 내고 종용했으나 지금까지 끈질기게 철거를 거부해온 이들은 <이사 갈 곳이 없다>는 막연한 이유만으로 시의 지시를 묵살 … 이러한 사이비종교가 발붙일 수 없도록 보다 과감하게 단속돼야만 한다(『한국일보』 1977. 4. 22).

당시 신문 지면을 뒤덮던 기사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박홍숙이 살았던 무허가 판자촌은 무당과 점쟁이들이 모여 사는 ‘무당골’이고, 그의 집 역시 무당집이며, 박홍숙의 광기 역시 이러한 거주 환경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홍숙이 체포되고 그 결과 철거반원 살해 사건이 박홍숙 일개인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라는 점이 밝혀지기 전까지 미디어들은 그 사건을 “무당촌 무허가 건물 철거하던 구청직원 주민들 못대로 3명 절명, 이를 보고 있던 30여 명의 주민들이 낮과 몽둥이로 주민들 집단 난동(『동아일보』 1977. 4. 21)”, “마을 청년 3명이 합세하여 기왕 뜯길 집이나 힘들일 것 없이 불을 지르자고 방화… 불이 피어오르는 것을 신호로 박군 등은 철거반원 7명을 둘러싸고 개머리판 없는 총을 쏘며 위협(『신아일보』 1977. 4. 21/이상 신문기사들의 소재는 김원(2011) 참조)”에서 볼 수 있듯, 그 곳 ‘무당골’ 지역 주민들의 소행으로 단정 짓는 추측성 기사를 거리낌 없이 쓰고 있었다.¹⁰⁾

하지만 1977년 당시 현지인들의 증언을 수집한 김현장의 기록이 보여주듯,¹¹⁾ 대중매체들의 떠들썩한 보도와는 달리 그곳은 결코 ‘무당골’

10) 푸코는 민중들의 범죄를 다루는 통속 신문의 어법에 주목하며 그 정치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통속 신문에 아주 빈번하게 나타나는 ‘상보(詳報), 정황, 설명’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들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신문이나 서적이 부여하는 중요성과 관련해 이런 종류의 어법이 수행하는 기능을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다. 요컨대 범위를 바꾸어 이야기의 일부를 확대해서 이야기를 일상성에 가까워지게 하려고 한다. 이러한 변형을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평소라면 품위나 사회적 중요성이 결여되어 있어 어차피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요소인 인물, 이름, 행위, 대화, 물체 등을 서술 속에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기한 것과 같은 모든 자질구레한 사건들이 — 그것이 자주 일어나고, 바뀌지 않는 사건이라고 해도 — 사람들의 기억 속에 대단히 특이하고, 진기하며, 이상하고, 독특한 사건이라는 인상을 주어야 한다(Foucault 2008[1973]: 388).”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신문들은 예전 시기 범죄 이야기가 가졌을지 모를 민중적 표현을 거세하면서, 법규를 예증하고 그 바닥에 있는 정치 도덕을 전달하는 매체가 되었음 (ibid., 393)을 덧붙이고 있다.

11) 김현장의 기록에 따르면 덕산골을 무당들의 소굴로 보는 미디어의 시선에 마을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10년 전 제가 그곳으로 이사를 갔을 때만 해도 그 마을은 집이 대여섯 가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때 살면서 보니까 그곳의 물이 좋아서 아픈 사람이 병을 고친다는 이유로 시내에서 접하는 사람들이 가끔 한두 사람씩 찾아 와서 굿을 해요. 그럴 따름이지, 그곳 사람들이 굿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당이라는 이름은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에

이 아니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박홍숙 역시 재판의 ‘최후진술’에서 마을을 무당촌이라며 매도한 당국이나 미디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사고가 나자 당국은 그 마을을 무당촌이라 했고, 그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무당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온갖 추악하기 짝이 없는 것들을 나에게 뒤집어씌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말 못하고 쫓기는 짐승처럼 선량하고 불쌍한 그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무당이라고 하다니! 이 무슨 비열한 짓입니까? 이 더럽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덜 된 수작은 무엇을 의미한단 말입니까? 그래도 마음에 켜기는 것이 있었던지 자기네들의 실책을 호도해 보려고 전부터 말썽이 되어 왔던 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허술한 그 마을의 집 두 채를 보란 듯이 그대로 두었다고 합니다. 이야말로 속이 뻘히 들여다보이는 우스운 장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박홍숙 『최후진술』 중에서)?

문제는 왜 그 곳이 다른 아닌 ‘무당골’로 규정되어야 했는가에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앞서 인용한 한국일보의 기사(1977. 4. 22)에 나온 것처럼 신흥종교는 물론 그 넓은 범주인 무속은 ‘미신’이자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며, 따라서 ‘문명’의 이름으로 정화해야 할 대상이라는 논리가 1970년대 한국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내면화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근대 한국의 출발인 개화기-구한말 시기부터 일제 식민지시기를 거치면서 외부의 서구 문명 혹은 식민지 통치당국의 시선 아래, ‘미신’, ‘사교’(邪敎), 광기, ‘비(非)문명’으로 간주되면서 탄압을 받아 온 무속 및 유사종교들의 오랜 전사(前史)가 깔려 있다. 식민지 지배가 끝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거듭된 탄압과 그 논리의 내면화를 통해 한국 사회는 무속=비문명/비합리/비이성이라는 부정적

요(남성, 21세).”/“그것은 정말 불쾌하게 생각해요. 시민들이 믿고 의지할 데가 어디 있어요? 라디오나 신문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정확한 보도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사건 소식을 전해 듣고 라디오를 틀어봤어요. 밤 9시 뉴스를 들어보니 무등산에 있는 사이비 종교집단의 주민들이 낮과 몽둥이를 가지고 항거해가지고, 아니 항거가 아니고 난동을 해가지고 철거반원 2명이 죽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나왔는데 그것은 정말 당치도 않은 소리예요. 사람들이 어째서 그렇게 막 허위로 보도하는 건지 모르겠어요(여성, 18세).”

등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¹²⁾

실제로 1970년대 신문을 들여다보면, 무속의 폐해를 비판하는 기사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 한 예로 1978년 9월 21일자 경향신문을 보면, 『얼굴 없는 유사종교- 미등록 사찰·암자들 국립공원 계룡산을 좀 먹고 있다』는 표제 아래 “이 곳을 찾는 신도들은 도시 변두리나 인근 농촌의 영세 서민층이나 지식수준이 낮은 서민층이 대부분, 허황된 교리에 속고 또 속는다”라고 현실을 비판하면서, “자연을 훼손하고 건전한 사회의식마저 좀먹는 미등록 유사종교 건물이 정화돼 자연 그대로의 자연으로 보존될 날은 그 언제인가”라는 탄식으로 끝을 맺는 정형화된 기사가 신문의 한 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또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976년부터 산림청을 중심으로 전국의 산림보호직원을 총동원하여 특수지역인 계룡산, 무등산, 용문산, 지리산 등 ‘사이비종교 성행 지구’에 세워진 불법축조물-움막, 암자, 기도원, 절 등- 대대적인 단속이 전개되고 있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매일경제』 1976. 3. 5; 『동아일보』 1976. 4. 21).

이러한 신문기사들은 역설적으로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신흥종교(무속계를 포함)의 교세가 급격히 커졌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급격한 산업화와 기존 공동체의 붕괴, 그리고 기성 종교에 대한 불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신흥종교로 향하게 했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세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을 미신이자 ‘불건전’으로 규정하는 정부 혹은 미디어의 논리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했다. 앞서 인용한 덕산골 주민들의 증언이나 박홍숙의 최후진술 역시 자신들이 사는 곳을 ‘무당골’로 규정하는 논리에 대한 ‘거부’이지, 그러한 시선 자체가 갖는 폭력성에 대한 근원적인 비판은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저항 논리는 자신들도 “건전한 사회시민”이라는 것을 주장하

12) 개화기에서 식민지기에 이르기까지 무속 및 유사종교를 미신이자 비문명으로 규정하는 담론들의 생산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줄고(2004)를 참조할 것.

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물론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무속’은 체제에 대한 저항운동의 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김광역 1991), 그 때의 무속 역시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일상적인 실천 속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깨끗하게 정화된 한민족의 기층문화, 전통에 한정된 것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무속은 박홍숙을 ‘괴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형사당국이나 매스 미디어가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였을 것이다. 무등산의 무허가 거주지를 철거하는 데 있어, 그들을 도시 빈민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무당골’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 행정 집행을 훨씬 수월하게 정당화할 수 있는 책략이었을 수도 있다.¹³⁾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책략은 보기 좋게 성공했다. 현재까지도 대다수의 광주 시민들에게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덕산골’은 심각했던 도시 빈곤의 역사를 증거하는 장소라기보다는 ‘무당골’로 기억되고 있을 뿐이다. 1970년대 한국사회에서 무속은 여전히 콘라드J. Conrad적 의미에서 ‘암흑의 핵심’(heart of darkness)이었다.

5. 하층민은 말할 수 있는가?

박홍숙이 도시빈민의 비참한 현실을 알리기 위해 세상과 교신할 수

13) 1970년대 당시 언론이나 기성 종교계, 그리고 학계는 한목소리로 무속이나 신흥종교의 범람과 그 폐해에 대해 경계하며, 그 정화와 근절을 호소하고 있었다. 또 당대 관주도 새마을운동 차원의 정신계선이나 생활개선운동 역시 그 한 항목으로 미신 타파를 거론하고 있었다(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김원(2011)을 참조할 것). 마녀 배난단티의 밤의 전투를 연상시키는 이러한 싸움은 그만큼 당대 무속이나 신흥종교가 일반 민중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이기도 하겠지만, 또 개화기-구한말부터 내면화되어 온 “무속·신흥종교=미신=비문명”이라는 논리가 체제 내화하는 시기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매스미디어가 무허가 정착민촌의 철거를 그 곳이 무속, 사이비종교의 온상지라는 이유로 정당화하는 논리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있는 수단은 그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건이 터진 후에야 비로소 그가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더욱 비극적이다. 물론 하층민이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극히 일상적인 현실이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응시의 대상일 뿐이며, 그들의 발언은 죽어가는 자의 증얼거림으로, 혹은 역사적 기록의 행간에서나 묻어나올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살인’은, 19세기 프랑스에서 발생한 존속 살해범 피에르 리비에르 사건에 대한 한 논평문이 이야기하듯, 누군가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일 수 있다. 비록 리비에르의 살인이 의도적인 것이고, 박홍숙의 그것이 우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들이 세상과 교신할 수 있는 것은 ‘살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였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토착민이 발언하고 그것을 남이 들을 수 있게 하려면 먼저 죽이고 그 때문에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기회를 발견한다. 그들의 행위는 언어였다.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한 것일까(Foucault 2008: 352)?”

리비에르와 같이 그의 일생을 기록한 수십 페이지의 수기를 남기지 못한 것은, 대신 그는 재판, 그리고 최후진술이라는 언어를 통해 자신과 같은 하층민들을 버렸던 세상과 교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자신이 온전한 정신인지 미친 짓인지 극과 극이 현존하는 현실에서 오라가락하는 내 정신을 내가 알 바 아닙니다. 미친 정신병자의 개소리라 해도 좋고 빛나간 영웅심이며 궤변이라 해도 좋습니다. 나 자신이 바라는 바는 다음에는 이 같은 불상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면 죽어가는 몸으로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 최후진술은 그것이 과연 박홍숙 개인이 쓴 것인가, 혹은 변호사와의 공동작품인가와는 무관하게, 재판장에서 그 진술을 ‘낭독’하는 행위에 의해, 온전히 그의 것으로 남았다. 그리고 이 진술은 제국주의적 법과 교육의 에피스테메적 폭력의 회로 안과 밖에서 과연 “하층민은 말할

수 있는가(Can the subaltern speak)?”라는 물음을 던졌던 스피박의 ‘비관적’ 우려(Spivak 1988)를 충분히 불식시킬 만큼, 지금의 시점에서도 풍부한 성찰과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오히려 우리는 스피박의 질문을 다음과 같이 바꿔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층민의 말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가?”, 아니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백자 원고지 27-8매 분량의 최후 항소문에는 24세의 한 청년이 왜 그런 비극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는가, 그 전말이 매우 논리정연하게 기술되어 있다. 우선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과 유가족과 국민들에 대한 거듭되는 사죄로부터 시작되는 그의 글은 당시 자신과 가족이 처했던 암울한 현실로 방청객들을 인도한다. 가난 때문에 어머니, 동생들과 사방으로 흩어져 지내야 했던 그는 비록 “돼지움막보다도 못한 보잘 것 없는 집이지만”, 무등산 덕산골에 집을 지었다. 그리고 그 곳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지만, “당장 이사 갈 곳도 없고, 참으로 피와 땀의 결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고생고생 그 고생을 해서 지은 집을” 차마 자신의 손으로 부술 수는 없었다. 더구나 전해겨울은 “오십 년 만에 처음 있는”, “보리가 다 얼어 죽었을 정도로 4월 초까지 눈이 온” 혹독한 추위라서 계고장이 나왔지만, 이사를 떠날 엄두를 내지도 못하는 형편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사정은 안중에도 없이, 철거 담당자들은 “‘상부의 명령이다’, ‘이런 것들을 놔두면 또 집을 짓는다’ 하면서 끝까지 외면하며 (집들을) 모조리 태워버렸다.” 그는 사랑하는 집이 불타고, 그들에 의해 떠밀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느꼈던 감정의 편린을 다음과 같이 토로한다.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무식하고 등신같이 생겨서 인간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 할지라도 자기 것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사정을 하고도 끝내 외면을 당해야 옳단 말입니까? 허물어진 담장을 부여잡고 울부짖거나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르며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안타까이 허둥대는 그들은 국민이 아닌란 말입니까? 반 뼉이 나가버린 채 초점 잃은 눈으로 멍청히

바라보시던 어머님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말인즉 그렇지 아버규환을 이루는 그 당시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앞서고 이가 갈리는 그 당시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었습니까(『최후진술』 중에서)?

“말인즉 그렇지”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이는 어디까지나 사건이 저질러진 다음의 회고적 진술에 지나지 않는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 그가 느꼈을 가슴 밀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모멸감, 분노, 절망감은 위의 이성적인 언어에서는 도저히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감정의 강도(intensity)를 포기하고 이성적인 언어를 선택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저지른 사건을 보도하던 매스 미디어의 편향성(4장 참조), 그리고 이러한 폭거를 용인하고 사실상 방관한 국가의 시책에 대한 비판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동정은 못해줄마정 세상에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래도 조금은 대책을 바랐던 우리가 어리석었을 뿐입니다. … 물론 당국에서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손톱 밑에 비집 드는 줄만 알았지 염통에 썩기는 줄은 모르는, 백성이야 죽건 말건 명분 세우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소인배들의 옹졸한 생각이라고 밖에 더할 수 있었습니까? 이런 옹졸하고 알량하고 옹졸한 소인배들로서야 어떻게 국가의 백년대계가 세워질 수 있었으며 만인의 고통을 염려하고 만인의 고통을 보살필 수 있던 말입니까(『최후진술』 중에서)?

이러한 그의 진술에 응답이라도 하듯, 최후진술이 있었던 그 해(1978년) 2월 박순천, 김옥길, 박대선, 이항녕, 손인실, 정희경, 박병배, 오지호 등을 위시하여 63명의 광주 내외 사회 저명인사가 참여한 ‘구명위원회’ 결성된다. 결성 취지문에서 드러나듯, 구명위원회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주된 인식은 이 사건이 “단순한 한 개인의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추진해 왔던 고도 경제성장의 그늘 아래서 소외되었던 가난한 이웃들을 우리 모두가 방치해온 결과로 발생한 도시 빈민 지구의 무주택 문제가 첨예화한 표현”이라는 것, 그리고 “사회에서 소

외된 집단이나 개인이 일부 무책임하고 관료적인 말단 행정의 횡포 앞에서 대처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그 사건의 책임을 박홍숙 개인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들은 ‘국민 총화’를 강조하는 당시 박정희 행정부의 언어를 비틀어, “잘못 교육된 소수 관리들의 형식적이고 융통성 없는 공무 집행이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총화 단결을 역행하는 행동일 수도 있으며 그간 정부와 국민의 지대한 노력으로 쌓아 올린 국민 총화의 탑 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 바로 그것”이라는 식의 역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구명위원회의 언어는 유신 치하의 냉혹한 현실에서, ‘시민사회’라는 이름의 사회집단이 낼 수 있는 비판 언어의 ‘최대치’라고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결성 취지문은 박홍숙의 최후진술에 공명하며 그 사건이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인 모순의 한 폭발이라고 진단하면서, 그 책임 역시 우리 사회가 함께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고 말았지만 그 책임을 오직 박홍숙 군에게만 돌려도 괜찮겠습니까”라는 ‘정상참작’을 바라는 절절한 호소는 오히려 그의 행위를 우발적 ‘일탈’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그 사건이 우리 사회의 빈곤이라는 구조적 모순의 한 폭발이라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상대적으로 퇴색시켜 버리는 것은 아닐까. 나아가, 정상참작이라는 방법이 여론과 법 사이에 생겨나는 과도한 엇갈림을 감소시키면서 법률의 일반적인 재량을 수정하게 하는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권력 자체에 대한 이의 제기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효과를 낳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Foucault 2008: 405).

따라서 박홍숙 사건을 35년이 지난 지금 다시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상 참작’이라는 틀을 넘어서서, 그의 행위가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해 보다 천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한 시도의 한 예로 김원은 ‘만약’이라는 가정을 단서로, “박홍숙이 1980년 5월에 감옥이 아닌 거리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만약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를 80년 오월항쟁의 시민군으로 기억할 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5·18 참가자와 피해자 가운데에는 생산직 노동자와 서비스 노동자는 물론, 도시하층민의 비율이 유난히 높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박홍숙은 그의 계급적 배경에서 보든, 아니면 타고난 성품에서 보든 시민군에 합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홍숙의 여동생은 자신들 모녀(박홍숙의 어머니, 여동생)의 신분을 밝히는 것만으로 80년 오월 당시 독침사건, 스파이사건 등으로 인해 상당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던 도청에도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이제는 말할 수 있다: 무등산 타잔 박홍숙 사건』). 심지어 박홍숙의 어머니는 80년 5·18 당시 직접 주먹밥을 지어 시민군에게 전달하는 등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제 1회 오월어머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물론 그러한 가정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경계가 필요하지만 그 위험성은 김원 역시 잘 알고 있다. 구하(R. Guha)의 논의를 빌어, 범죄는 사회적 맥락 아래에서 체제에 대한 포괄적 도전의 일부분이고, 범죄와 봉기라는 두 코드가 중첩되고 모호성이 소멸될 때 봉기의 정치성이 드러난다는 것, 즉 근대의 부정성을 범죄라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박홍숙을 ‘훼손된 영웅’으로 독해하는 시도는 신선하다(이상 김원 2011: 381).¹⁴⁾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박홍숙은 결코 오창은(2005)의 연구에서 70년대 한국사회의 ‘훼손된 영웅’의 전형으로 거론된 이문구

14) 물론 김원의 가설은 1960-70년대 한국의 도시소설에 나오는 범법자들을 근대의 압축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양이면서 조국 근대화의 이면을 후비는 (미필적) 고의성을 지닌 범법자로 형상화했던 이문구와 황석영의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 범법자들이 ‘훼손된 영웅’으로 범주화한 오창은(2005)의 연구에 크게 빛지고 있음을 밝혀 두어야 한다. 오창은의 위 논문에서는 이문구의 소설 『두더지』나 황석영의 소설 『이웃사람』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가리켜, 이들은 한국 근대의 압축성장 와중에서 발생한 희생양이기 때문에 영웅으로 형상화될 수는 없었지만, 근대의 부정성을 범죄라는 부정적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훼손된 영웅’이라고 정의 내린다(오창은 2005: 156).

나 황석영의 소설 속 주인공들처럼 의식적인 거리의 범죄자들도-물론 박홍숙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가 인정되어 사형이 집행되었지만, 그렇다고 그 공간에서 살아남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악한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는 결코 늙은 ‘회장님’(도시의 부자)에게 자신의 피를 팔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회에 대한 적의와 분노로 “두 뺨쯤 되는 식칼”을 미리 구입해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생면부지의 젊은이를 살해하기도(황석영, 『이웃사람』), 그렇다고 자신을 “함정에 빠진 사회적 미야”로 규정하면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지도 않았다(이문구, 『두더지』). 오히려 그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계속 체제에 순응하며, 그 안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박홍숙 일기』 참조) ‘착실한’ 청년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토록 무참히 자신의 앞에 있는 다섯 명의 철거반원에게 망치를 휘두르고 말았는가. 다시 말하면 왜 눈앞에 어머니가 쓰러져 통곡하다 졸도하는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시장과의 담판을 위해 여동생을 보냈던 그가 결국 다섯 명의 철거반원에게 망치를 휘두르고 말았는가 라는 물음은 여전히 남아 있다.¹⁵⁾ 물론 그 ‘일탈’, 혹은 ‘정신착란’(『동아일보』 1977. 4. 21)이나 ‘발작’(『경향신문』 1977. 4. 21)의 순간을 ‘과학적’ 언어로 재현하는 것은 지난한 작업일 것이다. 그의 최후 진술서에는 집이 불에 타고, 철거반원들에 의해 어머니가 떠밀려 쓰러지던 순간 그가 느꼈던 분노의 흔적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오히려 평소의 품행방정한 생활 태도, 그리고 범행을 자백하고 죄를 뉘우치는 그의 지극히 ‘이성적인’ 태도는, 사형집행을 막아줄 수 있을 마지막 카드인 ‘광기’의 판정, 즉 정신의학의 개입도 스스로 차단시켜버렸다.

박홍숙이 죽어버린 이상 결코 그 진실을 알 수 없을(혹시 살아 있다

15)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박홍숙의 『최후진술』이나, 구명위원회의 호소문을 비롯한 그 어떤 문서에서도 확실하게 제시된 바 없다.

해도 설명하기는 어려울) 그 찰나의 순간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문학적 상상력’을 우회하는 것이다. 그 한 예로 도스토예프스키의 『백치』나 『악령』,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에는 등장인물들을 갑자기 엄습하여 살인으로 몰아가는(그것이 ‘부친 살해’든, 아니면 ‘자살’이든) 광기, 즉 간질 발작의 순간이 잘 그려져 있다. 또 우리는 내리쬐는 뜨거운 햇볕에 정신을 잃고 방아쇠를 당긴 『이방인』의 피르소를 떠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찰나의 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굳이 19세기 말의 러시아나 20세기 중엽의 알제리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또 간질이나 기타 정신 병리학적 용어로 해석할 필요도 없다. 박홍숙 사건에 조금 앞선 1972년 광주(廣州) 대단지에서 일어난 시위(폭동? 혹은 봉기?)에 우연히 휩쓸려 들어간 한 소시민의 심리를, 작가 윤홍길은 탁월한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난 비에 젖은 사람들이 똑같이 비에 젖은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 그 장면에 그렇게 감동하지 않았어요. 그것보다는 다른 걱정이 앞섰으니까요. 이 친구가 여기까지 끌고 와서 끝내 날 어쩔 작정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잠시 지켜보고 있는 사이에 장면이 휘파닥 바뀌어버립니다. 삼륜차 한 대가 어찌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는 그만 소용돌이 속에 파묻힌 거예요. 데모를 피해서 빠져나갈 방도를 찾느라고 요리조리 함부로 대가리를 디밀다가 그만 뒤집혀서 벌렁 나자빠져버렸어요. 누렇게 익은 참외가 와그르르 쏟아지더니 길바닥으로 구름니다. 경찰을 상대하던 군중들이 돌맹이질을 막 멈추더니 참외 쪽으로 벌레처럼 달라붙습니다. 한 차분이나 되는 참외가 눈 깜짝할 새 동이 나버립니다. 진흙탕에 떨어진 것까지 주워서는 어적어적 깨물어 먹는 거예요. 먹는 그 자체는 결코 아름다운 장면이 못 되었어요. … 이젠 정말 나체화구나 하는 느낌이 처음으로 가슴에 팍 부딪쳐옵니다. 나체를 확인한 이상 그 사람들하곤 종류가 다르다고 주장해나 온 근거가 별안간 흐려지는 기분이 듭니다. 내가 맑은 정신으로 나를 의식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 사흘 후에 형사가 출판사로 찾아와서 수갑을 채우더군요. 경찰에서 증거로 제시하는 사진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진 속에서 난 버스 폭대기에도 올라가 있고 석유 깡통을 들고 있고 각목을 휘둘러대고 있기도 했습니다. 어느 것이나 내 얼굴이 분명하긴 한데 나로서는 전혀 기억에 없는 일들이었으니까요(윤홍길 1997: 181-182 / 강조-인용자).

데모를 피해서 빠져나갈 방도를 찾던 주인공이 길거리 진흙탕에 쏟아지는 참외들, 그리고 그 참외를 먹으려고 달려붙는 군중들의 모습을 본 후, “그 사람들하곤 종류가 다르다고 주장해온 근거가 별안간 흐려지면서” 정신을 잃는 그 순간, 혹은 박홍숙의 그 찰나의 순간은 정신병리학적인 언어에 의해 오염되어버린 ‘착란’이나 ‘광기’로는 결코 담아낼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발하는 근원적인 분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결코 합리적인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운, 따라서 아직은 문화적인 상상력과 재현(representation)에 기대어 이해할 수밖에 없는 영역의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그가 휘두른 폭력의 결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붕기’와 ‘범죄’를 구분하면서 박홍숙을 ‘훼손된 영웅’(김원 2011)으로 보는 논리는 이 ‘궁지’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다. 하지만 ‘붕기’와 ‘범죄’의 차이를 단지 현실에 대한 의식화의 차이, 혹은 이성과 비이성의 차이로 환원시키는 논리는 사회가 규정하는 정상/비정상의 범주에 너무 쉽게 승복해버리는 것이 아닐까.¹⁶⁾ 다시 말하면, “사회질서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움직임은, 공포의 시선에 내몰리고, 불법이라고 간주되며, 피억압자에게는 자기를 지킬 권리도 향수해야 할 정당한 법도 허용되지 않는다(Bulhan 1985, 富山一郎 2013에서 재인용)”는, 따라서 그러한 사회제도를 파괴하는 폭력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파농(F. Fanon)의 폭력론이 갖는 ‘정치

16) 김원은 구하(R. Guha)의 논의를 차용하여, 범죄는 사회적 맥락 아래에서 체제에 대한 포괄적 도전의 일부분이며, 범죄와 붕기라는 두 코드가 중첩되고 소멸될 때 붕기의 정치성은 드러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침묵하거나 정치적 주체로서 자격을 상실했던 하층민(subaltern)들이 지배질서에 따라 정해진 자리를, 도시붕기나 탈출, 그리고 범죄라는 사건을 통해 ‘단절’(혹은 ‘불화’)함으로써 재현형식에서 스스로 ‘탈정치화’함으로써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원 2011: 381). 하지만 동시에 박홍숙의 삶의 방식은 도시하층민의 생존방식에 실재했던 것이지만 개별적 범죄 형태에 머물렀기 때문에 공동체 삶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었다는 한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그의 주체성을 구성하는 작업에서 한 걸음 후퇴하고 있다.

적 올바름'(politically correctness)에 논리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그 폭력이 실제로 저질러졌을 때, 그 현전한 실재(the Real)의 무서움에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아버리는 소치가 아닐까. '훼손된 영웅'이라는 관점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 폭력에서 자수와 법정투쟁, 그리고 결국 사형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박홍숙이 보여주었던 '행위'가 갖는 잠재성(potentiality), 나아가 전복성을 결코 드러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부당한 현실과 맞서 싸우기 위해 그가 선택한(과연 '선택'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일까) 폭력은 '범죄'로 전락하고 말았고, 그는 심판을 받았지만, 그 폭력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그 폭력의 우발성, 즉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 일시적 착란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동정, 혹은 변호가 아니다. 오히려 폭력에 의해 드러난 한국 사회 압축근대의 도시화가 낳은 구조적 문제, 그리고 광기라는 행위가 갖는 본질적 이해와 함께 사건 이후 곳곳이 걸어갔던 그의 삶의 궤적이어야 한다. 박홍숙 사건 이후에도 상계동, 봉천동, 그리고 최근의 용산 재개발에 이르기까지 도시빈민과 재개발, 철거의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박홍숙은 온 몸으로 물음을 던졌다. 그 물음에 우리는 응답했는가. 아니 응답할 준비라도 하고 있는가. 박홍숙 사건을 지금 바로 여기서 상기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6. 나가며

1980년 12월 24일 성탄 전야, 광주 교도소에서 박홍숙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형 집행 직전 박홍숙은 자신을 무등산에 묻어 달라고 얘기했지만, 당국의 허락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고, 현재 그는 광주대학교 뒤편 기독교 묘지에 묻혀 있다(『광주일보』 2004. 6. 23). 삼엄한 5공 치하, 더구나 80년 오월 이후 숨죽일 수밖에 없었던 광주에서 그의 죽음

이 공공연히 이야기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서서히 잊혀져갔다. 결국, 그는 ‘제2의 전태일’이 되지 못했다. 생전 그가 꼼꼼히 써내려간 일기마저 사라져버린 지금, 그가 세상과 소통하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또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그 전모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억측’을 넘어 ‘악의적’이기까지 한 미디어들의 보도기사와 함께, 1977년 당시 김현장이라는 한 개인이 직접 보고 인용했던 일기의 파편들과 짙막한 인터뷰들, 그리고 사건 이후 재판에서 낭독된 『최후 항소문』과 교도소에서 그를 만났던 사람들의 단편적인 기억뿐이다.

이 글은 ‘무등산 철거민 살해 사건’이라는 ‘표상’을 구성하는데, 1970년대 한국사회의 (도시화) 개발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문명화라는 담론이 어떻게 관철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소박한 목적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무허가 판자촌에 사는 도시 빈곤층의 삶을 ‘비정상’이라고 규정하는 것을 통해 부여되는 ‘정상’이라는 표상공간이 실제로 은폐하는 사회적 모순이 ‘비정상’이라고 규정된 그들에 의해 ‘간파’(penetration)되고 있었음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밝히고자 했던 것도 이 글을 쓰게 된 또 하나의 이유였다.

물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물음이 하나 남아 있다. 박흥숙이 휘두른 폭력에 의해 목숨을 잃은,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날의 상처의 후유증으로 반신불수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줄 수 있을까 라는 다소 착잡한 문제이다. 그들의 공무 집행 방식이 아무리 무자비하고 폭력적이었다 해도, 그것이 그들이 목숨을 잃어야 할 이유가 되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시 주최의 위령제가 열려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각계각층에서 많은 조위금이 전달되기는 했지만, 그것이 사랑하는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유족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세련된 권력 이론의 틀에서는 결코 보이지 않는, 무자비하고 ‘그로테스크한’ 권력이 행사되는 현장의 실무자들이었고,

어쩌면 철거민들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알고 있을 이웃집 주민이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그들 역시 국가폭력의 희생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다. 그것은 1980년 오월 광주에 파견되었던 공수부대원들로부터 2009년 용산 남일동 건물 철거현장에서 숨진 경찰특공대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사회의 하나의 ‘방식’이며, 국가폭력에 반대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기도 했다(용산참사를 다룬 『두개의 문』(2011)에 대해 쏟아져 나온 리뷰나 감상평들을 보라). 하지만 지극히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세련되게 보이는 이 논리가 갖는 한계는 무엇보다 되풀이되는 폭력의 연쇄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들이 희생자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것이 폭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던 그들의 과오를 가리지는 못한다. 또 다른 폭력을 불러일으켰던 폭력에 대한 성찰이 전제되지 않은 ‘희생자’론은 지나치게 단일하며 미래의 폭력을 예방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홍숙의 자수와 법정 투쟁은 그러한 폭력의 연쇄를 끊어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명의 철거반원들에게 망치를 휘둘렀던 바로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어쩌면 그 실마리가 될 수 있을 박홍숙에 대한 정신감정의 언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를 비정상이자 괴물로 만들어 이 사회에서 제거하는 것에 급급했던 당시의 통치 당국에게 정신감정이라는 ‘고급한’ 지식을 기대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물론 정신병리학적 언어가 그 찰나의 순간을 재현해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본고에서 문학이라는 텍스트를 통해 “바로 그 순간”을 재현해보려 했던 시도는 인간이라는 복잡 미묘한 감정을 지닌 존재를 이해해보고자 하는(지극히 아렌트(H. Arendt)적 의미에서의) 하나의 사유에 지나지 않는다.

동시에 삼거리의 좁고 가파른 길에서 마주 오던 노인, 즉 자신의 아버지 라이오스와 실랑이 끝에 결국 그를 살해했을 때, 오이디푸스가

느꼈을 분노를 심리학적으로 설명하는 작업이 과연 현재의 시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소포클레스의 비극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는, 자신의 폭력이 초래한 비극적 상황의 처참함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던 오이디푸스라는 한 인간의 ‘고귀한’ 행위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 ‘고귀함’에 있어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박홍숙 역시 사건 이후 스스로 경찰서에 출두해서(자진해서 눈을 찌르고), 형무소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사회에 의해 합의된)의 대가를 달게 받으며(방랑하다가) 결국 죽어갔다. 그리고 스스로 눈을 찌른 오이디푸스의 방랑과 죽음이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노래되었듯이, 박홍숙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도 박홍숙 사건은 하나의 ‘섬광’ 혹은 ‘계시’(revelation)처럼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¹⁷⁾

논문접수일: 2013년 10월 15일, 논문심사일: 2013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13년 12월 15일

참고문헌

신문자료: 『전남일보』, 『전남매일』,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광주일보』, 『동아일보』

방송자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무등산 타잔 박홍숙 사건>(2005. 5. 15)

17) 『나 피에르 리비에르』의 역자 심세광은 섬광에 대해 역자 후기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언급을 남기고 있다. “범죄는 섬광을 발생시키고 섬광은 그것이 야기하는 놀라움과 공포, 경악의 힘과 연결된다. 그리고 이 섬광 속에서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보이게 되고, 이 특징은 가장 착란적인 행위 한 복판으로 의미가 회귀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Foucault 2008: 528).”

논문 및 단행본

광주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5-1997 『광주시사』, 광주광역시.

광주직할시

1992a 『광주도시계획연혁』, 광주직할시.

1992b 『광주도시계획사연구』, 광주직할시.

김광억

1991 “저항문화와 무속의례,” 『한국문화인류학』 23.

김원

2011 “훼손된 영웅과 폭력의 증언: 무등산 타잔 사건,” 『박정희시대의 유령들: 기억, 사건 그리고 정치』, 서울: 현실문화연구.

김현장

1977 “무등산 타잔의 진상: 무책임한 신문보도를 폭로한다,” 『월간 대화』 1977. 8.

1978 “이 불쌍한 무등산 청년의 죽음과 죽임,” 『뿌리깊은 나무』 1978. 8.

박선흥

1990 『무등산 그 유래와 전설·경관』, 도서출판 규장각.

서경식

2006 “괴물의 그림자: 고마쓰가와 사건과 식민주의의 표상,” 『난민과 국민사이』, 이규수, 임성모 역, 서울: 돌베개.

오창은

2005 “한국도시시설연구: 1960-7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유경남

2013 “1970-80년대 무등산 개발사업과 그 내파(內波),” 『지방사와 지방문화』 16권 1호.

윤홍길

1997[1977]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서울: 문학과지성사.

이영진

2004 “상처 입은 제국주의: 식민지 조선에서의 무속 담론과 神道 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장세훈

1989 “도시화, 국가, 그리고 도시 빈민: 서울시의 무허가 정착지 철거 정비정책을 중심으로,” 김형국 편저, 『불량촌과 재개발』, 서울: 나남.

전병학

1972 “지방지의 특수성과 현경영국면의 타개방안,” 『신문과방송』 1972

조세희

1976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서울: 문학과지성사.

조영호

1977 “르뽀 함평군 고구마 사건: 농민의 집단 저항 부른 농협의 고구마 수매정책,” 『월간 대화』 1977. 7.

최인기

2012 『가난의 시대: 대한민국 도시빈민은 어떻게 살았는가』, 파주: 동녘.

富山一郎

2013 “単独決起を想起するということ,” 『2013년 호남학연구원 국제학술대회 분노와 유토피아 발표 자료집』.

Foucault, Michel

2001[1999] 『비정상인들: 1974-1975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의 강의』, 박정자 역, 서울: 동문선.

2008[1973] 『내 어머니와 누이와 남동생을 죽인 나, 피에르 리비에르』, 심세광 역, 서울: 엘피.

Fujitani, Takashi

2003[1996] 『화려한 군주: 근대 일본의 권력과 국가의례』, 한석정 역, 서울: 이산.

Kearney, Richard

2004[2002] 『이방인, 신, 괴물: 타자성 개념에 대한 도전적 고찰』, 이지영 역, 서울: 개마고원.

Low, Setha M.

1999 “Spatializing Culture: The Social Production and Social Construction of Public Space in Costa Rica,” in Low, Setha M. ed., *Theorizing the City: The New Urban Anthropology Reader*,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 Press.

Mandel, Ernest

2001[1984] 『즐거운 살인』, 이동연 역, 서울: 이후.

Spivak, Gayatri C.

1988 “Can the Subaltern Speak,” in Williams, Patrick and Laura Chrisman eds, *Colonial Discourse and Post-colonial Theory: A R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Key concepts〉: Mudeung mountain Tarzan, urban poor, subaltern, redevelopment, normal/abnormal

Reconstructing a Crime:

Reinquiry of the 1977 Homicide in Mudeung Mountain

Lee, Yungjin*

The purpose of the current manuscript is to reconstruct the homicide case that occurred in the foothill of Mudeung mountain in Gwangju city in 1977. The culprit, Mr. Park Heungsook, was sentenced to death and hanged for killing 4 wrecking crews by swinging a hammer on their head. Dubbed as “Mudeung mountain Tarzan”, he was portrayed as a cold-blooded murderer by the contemporary mass media.

Two questions arise: “Why did such a horrid homicide occur in the remote foothill of a mountain?” and “How did the contemporary Korean society view this case?”. In an attempt to answer the questions, I focused 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background of the rapid development that Gwangju and Korean society was going through in late 1970s. In the next section, I tried to identify the Korean version of the mechanism of distinguishing normality and abnormality that universally operates in the process of economic and

* HK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Honam Studi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ocial development across societies. It is worth noting that once the culprit was identified as a shaman, the contemporary Korean mass media did not hesitate to diagnose him as a monstrous “lunatic”. However, this label was not based on a formal psychoanalytic diagnosis, which served as the primary tool for distinguishing abnormal individuals from normal citizens in Western societies in late 19th century.

Although it is not deniable that Mr. Park committed homicide, it is worth questioning whether the contemporary Korean society was willing to appreciate that a subaltern had no choice but to resort to violence against the government-sponsored injustice afflicted upon him. In this sense, it is important to make special note of Mr. Park’s court struggle since it was the only chance given to the subaltern whose voice had been denied in the process of redevelopment that ultimately wrecked his house. Re inquiry of the Mudeung mountain Tarzan’s homicide case provides a revelation as to how Korean society should view the current redevelopment of urban slum, which is wrecking another generation of urban poor’s right to housing.

